

막판 박대통령 직접 출석·대리인단 총사퇴 카드 쓸 수도

현재 24일 최종변론 남은 변수는

고영태 녹음 파일 물고 늘어지거나
고씨 직접 신문 끈질기게 요구할 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24일로 지정했지만, 최종 변론기일과 선고까지 ‘순항’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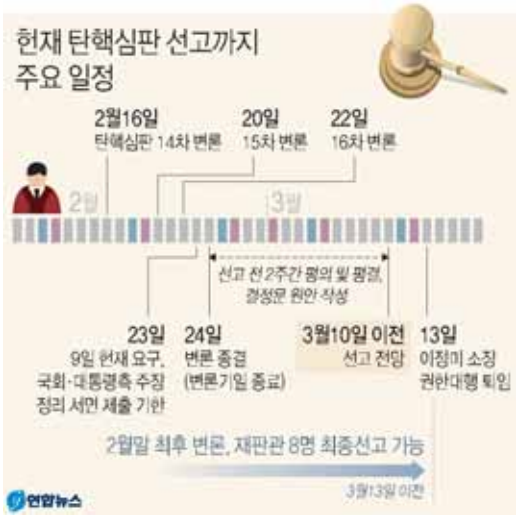
변론이 장기화할수록 심판이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큰 박 대통령 측이 심판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몇 가지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현재 안팎에서 보는 박 대통령 측의 ‘긴급 대응책’은 3가지로 수렴된다. 첫째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 고영태씨와 관련한 증인신문이나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검증 기일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고씨가 재단·정부 예산을 빼돌리려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폭로한 데서 촉발됐다고 본다. 이에 고씨에 대한 직접 신문 없이 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방안이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요 증인(고영태)이 나와야 한다”며 “고씨의 (검찰) 진술은 과장됐으며 허위”라고 했다.

두 번째 카드는 박 대통령의 출석이다. 대통령이 24일 최종변론 때 현재에 나오지 않은 이후 현재가 재판관 평의를 하는 와중에 출석 의사를 밝히는 방



법이다. 현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나오겠다’는 데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냈다’는 시비가 일 수 있다.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현재가 결국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고 선고 기일도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 전술은 최종변론 전 ‘대리인단 총사퇴’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하거나 끝낼 수 있는지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새로 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5만 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다만, 국가 중대 사건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과 여론 악화 가능성이 큰 부담 요인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경선 ‘역선택’ 변수…후보마다 엇갈리는 셈법

문재인 “경선 왜곡” 촉각…안희정·이재명 “국민 참여 걸림돌 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역선택’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투표권만 있으면 누구나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야당 지지층이 아닌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대거 참여, 표심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는 박사모 공지가 15일 SNS 등에서 퍼진 것이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주요 지지층의 스펙트럼에 따라 ‘역선택’ 논란을 바라보는 후보 간 셈법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다른 후보들과 큰 차

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내심 역선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이를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문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층, 수도권과 영남에서는 보수 정당 지지층 등이 선거인단에 참여, 타후보 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은 16일 “일부 보수 세력이 민주당 내의 경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권 교체론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한다면 민심대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중도 보수층에서 강세를 보이는 안희정 충남지사측은 ‘역선택’이라는 규정 자체가 당의 외연을 좁히려는 프레임이라면서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막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역선택 프레임’ 제기 배경이 안 지사의 급격한 상승세에 대한 문 전 대표 측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도 역선택 변수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역선택이 문 전 대표에 불리한 구도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 측의 김영진 의원이 “표본이 100만 명이 넘으면 역선택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한다면 역선택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행 압박 위해 미리 신청서 제출

연장 결정 입장차 커…진통 겪을 듯

특검 수사기간 연장될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검은 연장 사유로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답변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일각에선 특검이 수사 연장을 꺼려하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미리 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특검과 박 대통령 측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대면조사 성사를 압박하려는 우회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 측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1차 수사기간 종료시점인 28일까지 12일 남아 있는 만큼 굳이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 기간이 남았으니 충실히 수사하고 그것(연장)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기본적으로 수사에 전념할 때”라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압박했다.

“인터넷이 어려워…” 민주 시도당 전화 문의 쇄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이틀째인 16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직접 방문 접수를 하려는 문의전화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화 문의를 하는 사람들은 50~60대 중장년층이다.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에 익숙한 20~50대 청장년층과 달리 경우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콜센터(1811-1000) 접수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방법을 묻기 위해서다.

16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시·도당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선

후보 선거인단 모집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는 모두 51명(광주시당 40명·전남도당 11명)이다.

이들 대다수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연령층으로, 앞으로 직접방문 접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터넷 접수는 신청자 자신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콜센터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수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사 직접 방문을 통한 접수도 쉽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장년층 온라인 접수 서툰려
선거인단 서류접수 부쩍 늘어

현재 직접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처는 광주와 무안 등 각 시·도당별로 두 곳 뿐인데, 완도·진도·해남 등 서류 접수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대선 경선 후보 선거인단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건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이에따라 고연령층들은 민주당 경선 후보 투표 당일 각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단 신청 후 바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